

제헌절 60돌... 정치권 '개헌론' 봇물

정치권이 17일 60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봇물처럼 쏟아내 이번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이날 국회의원 167명이 '미래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낙연·이주영 의원)라는 모임을 결성하면서 개헌에 대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 60주년 기념식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긴 토론과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깊이 있는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차분하게 연구하겠다"며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개헌'을 실현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각종 언론의 조사결과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며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절차를 매듭짓자는데 거의 의견 일치라고 있다"며 무르익은 개헌 분위기를 전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개헌 문제와 관련, "이미 지난 대선 때 각 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다"며 "다음 정권에서 개헌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수록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국민에 의해 권력욕과 상관없이 국가의 번영을 보며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미래지향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국민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고 국회



김형오(오른쪽)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60주년 제헌절 기념 오찬 행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에서 두번째), 민주당 원혜영(세번째)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167명 '미래헌법연구회' 출범 분위기 띄우기

"민감한 사안...내년 이후 공론화 해야" 신중론도

의원의 상당수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 내부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지만 조기 공론화에 대한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위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경제도 어려운 만큼 폭넓은 연구 단계를 거쳐 내년 이후부터 공론화하는 주장이 세를 얻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아직 안착하지 않았다"며 "개헌논의가 너무 활발하게 이뤄지니까 국정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 나와 "내년쯤부터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 내에서 공식 논의를 출발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공론화 시기를 조절할 뜻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이달말까지 원 구성' 합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6일 만찬 회동을 갖고 이달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만났다"면서 "개헌 협상은 대체로 7월말까지 이뤄지지는 쪽으로 대체로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경진 공보담당 원내대

표도 "어제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공보담당 부대표가 모였다"면서 "협상은 아니고 친목 차원의 자리였지만 원구성은 7월말까지는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자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식사라도 한 번 하자고 해서, 대표들끼리 잡은 자리"라면서 "원구성은 원칙적으로 7월말까지 끝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서 부대표는 "7월말은 정해진 날이 아니라, 빨리 끝내자는 의미의 상징적인 날짜"라고 설명했다.

서 부대표는 원구성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는 "원 대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몇개월이 지나 상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입법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 건강권 확보...한나라도 초당적 협력해야"

최인기 국회 가축염병예방특위 위원장

"정부가 재협상할 수 없다면 국회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일명 광우병 예방법)을 고쳐서라도 국민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17일 "2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촛불 집회의 민심은 결국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인데 정부가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각오를 다졌다.

최 의원은 17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지난 3개월간 쇠고기 정국을 이끌었고, 지난 5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당내 최고 전



문가라는 지적에 따라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최 위원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 최고기 협상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만든 부칙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 등이 될 것"이라며 "쇠고기 협상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원활한 법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법개정특위에는 이외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우윤근(민주당), 이윤석(무소속)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 외교는 3無외교"

야권, 정부 외교정책 비판

민주당 등 야권은 17일 금강산 총격 피살 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사건 등을 고리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를 포함,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노선, 라인, 전략이 없는 '3무(無) 정책'이라고 규정한다"며 "노선이 무엇인지 오락가락하고 대북라인도, 한일간 정부정책을 보조할 수 있는 라인도 없다"

라며 "이에 따라 전략 자체가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 '실용외교'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명박 정부가 겁대기로 전략해 버린 통일부 기능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키지 않는 한 제2,3의 금강산 사태가 터져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신변보장

이 없으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진상조사의 진도가 나가려면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데, 대북라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상조사 근처에도 못가면서 북한을 상대로 실효성 없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대통령은 남북, 외교문제에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금강산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은 채 현대 아산에만 의지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행태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즉시 UN(국제연합) 등 국제사회를 통한 해결책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남북 국회회담 갖자"

김형오 국회의장 北에 제안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지난 90년 이래 중단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재개할 것을 북측에 촉구한다"며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 60주년 경축 기념식 경축사에서 "똥공 막혀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의장단이나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먼저 교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1정조위원장 우윤근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제6정조위원장 조영택

민주 정책위 인선안 발표

민주당은 17일 정책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 수석부위원장에 재선의 박영선 의원을 임명하는 등 정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책위 내 6명의 정조위원장 중 3명이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어서 민주당 정책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자치와 법제사법 정책을 담당할 제1정조위원장에는 17대 국회 전반기에 원내 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대야협상을 주도했던 재선의 우윤근 의원(광양), 통일·외교통상과 국방 정책을 다룰 제2정조위원장은 참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 재정경제와 예산·결산 등을 다룰 제3정조위원장은 재선의 오세재 의원이 각각 맡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윤근 의원〉 〈이용섭 의원〉 〈조영택 의원〉

또 건설교통·산업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담당할 제4정조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 노동·보건복지·중소기업 정책을 취급할 제5정조위원장은 최영희 의원, 문화관광·여성·교육 정책을 다룰 제6정조위원장은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조영택 의원(광주 서갑)이 각각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SM*61

대리점 모집

11월 15일까지 전국 각지역에 100여개 지점을 모집합니다.

● 지역별 모집: 영남, 호남, 충청,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모집대상: 20~40대, 10년 이상 영업 경험, 1000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

● 지원자격: 1. 한국인 2. 10년 이상 영업 경험 3. 1000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 4. 10년 이상 영업 경험 5. 10년 이상 영업 경험 6. 10년 이상 영업 경험

● 지원방법: 1. 전화 상담 2. 현장 방문 3. 서류 접수 4. 면접 5. 합격 통보 6. 계약 체결

● 지원처: SM*61 (주) 152-0100

부계은통용인내 판매사입부

www.bujagood.com

아직도 고가의 온돌침대를 목돈으로 구입하십니까?

할부식 렌탈서비스 - 월평균 50,000원~60,000원대(부이자 36회 까지)

보상판매 실시 온돌침대를 구입 시 현재 사용하는 침대(매트리스)를 보상판매

11월 18일 50,000원 구입 100,000원 고가 보상판매 매트리스까지

1. 국내 인기 브랜드 온돌 & 매트리스를 할부식 렌탈에 드립니다.

2. 월평균 50,000원~60,000원대 렌탈료로 부담 없이 렌탈 가능합니다.

3. 국내 최대 렌탈사로부터 저렴한 렌탈료로 렌탈 가능합니다.

4. 기존 침대 매트리스를 구입하면 렌탈료 50%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5. 렌탈료 50%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OPEN 기념

TEL: 062-961-9994